

與 “사법부가 내란 종식 방해”… 내란특별재판부 검토

尹 구속 취소·한덕수 영장 기각 등 계기 내란특별법 도입 시사
3대 특검 수사 확대…국힘 지자체장 계엄 가담 여부 진상 규명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바꾸기 음모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며 심사·재판이 더 공정·엄정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전 위원장은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제정·도입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사후 공지를 통해 “내란특별법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해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져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부 재정 확대, 내년 성장률 0.3%p 높일 것”

안도걸 “경제활력 회복 예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정부 발표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제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



(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수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저성장 추세를 방지한 결과, 성장기반이 붕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적자와 국제발행 확대는 새 정부가 거시경기에 충실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면서 “핵심은 늘어난 재정지출이 AI·반도체·문화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트럼프·시진핑, 경주 APEC 참석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시사 프로 출연…“김정은 초청 결정된 것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참석을 전제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을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확답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우리 대중 특사단이 중국 측과 여러 대화를 했는데, 이때에도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가 이뤄졌다.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진행자가 ‘현재 정부로서는 김 위원장을 초청할 루트(소통창구)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공식으로 김 위원장을 APEC에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김 위원장 참석에 대해)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거나 가능성을 띄우는 발언을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 후 판문점 등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북한이 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북한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며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권성동 체포동의안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

與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 명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향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는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명백하다. 그동안 부정해 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곧장 넘어가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면 표결은 9일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승절(3일)에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의 출장 일정으로 인해 우 의장이 돌아온 뒤 첫 본회의인 9일 표결하게 되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내달 1일 이후에나 국회로 넘어오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이튿날인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